

민주당, 최소 39명 이탈표… 총선 앞두고 ‘분당’ 수순 밟나

지난 2월 체포동의안 결과와 유사 방탄정당 이미지 해소 계기 될 것 이 대표 단식에 기일 연기 여부 관심

쌍방을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에 따른 역풍으로 비이재명(비명)계가 무더기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여 민주당은 내년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친명(친 이재명계) 대 비명(비 이재명계)’ 간 계파분열은 물론, ‘분당’의 위기까지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재명 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어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더군다나, 비명계에서 29명 이상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계산돼 당 분열 수순을 밟을 것이라 얘기도 나오고 있다. 무효와 기권표를 합산하면 39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뉴스스

표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날 입원 중인 이 대표를 제외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당초 이 대표가 지난달 31일부터 장기간 단식을 이어오자 당내에서도 동정론이 일어나면서 부결에 힘이 실렸다. 민주당은 재적 298석 중 167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반대표는 민주당 의석 수에 크게 못 미치는 136표에 그쳤다.

이날 표결 결과는 지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와 유사하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최소 30명이 넘는 대규모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면서 당내 내홍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 대표가 전날 부결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 역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

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시켜 달라는 의사를 전했다.

장기간 단식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이 대표가 부결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상반되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향후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또한 비이재명계가 사실상 무더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면서 계파 갈등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 이 대표, 자당 출신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키며 고착화된 ‘방탄 정당’ 이미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8일 쌍방을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해 구속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다만, 장기간 단식을 이어온

이 대표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체포해야 하는 이유를 장시간 설명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한 장관의 제안 설명 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검찰수사의 부당성에 대해 강변했으며 이후 제안설명에 나선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범죄 사실 요지를 설명한 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여기가 재판장인가”, “법무부장관이 검사인가”라며 거세게 항의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고성을 지르며 한 장관의 발언을 북돋기도 했다.

의원들의 항의로 한 장관이 발언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원들과 법무부 장관이 토론하는 자리 아니다. 국회법 따라 제안설명 할 의무와 책임 있다. 법무부 장관은 피의 사실공표의 우려 있으니 요약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尹 “글로벌 격차 해소해 韓 위상 강화”… 북러 군사거래엔 ‘경고’

尹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ODA 예산안 40% 이상 등 확대
부산엑스포 유치 의지 다져

윤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글로벌 격차 해소·북한-러시아 무기 거래 비판·2030 부산세계 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 등을 주제로 각국 정상들에게 기조연설을 한 데 이어, 11개국과 릴레이 회담을 하며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연합 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저는 오늘이 자리에서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이 세 가지 분야의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며 글로벌 중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대한민국의 공적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스

개발원조(ODA)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하고,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리를 추가로 공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이는 양국의 무기거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엑스포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이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

는 관문인 부산에서 2030년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책임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이루어 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엑스포 유치에 힘을 보탰다.

연설 후 윤 대통령은 스위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키르기스스탄, 모리타니아, 콜롬비아, 헝가리, 이스라엘, 태국, 불가리아, 그리스, 에스와티니 정상들을 연달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이들 정상들을 만나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미국 순방 3일차를 맞은 윤 대통령은 총 28개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했는데, 유럽 10개국, 아시아 7개국, 아프리카 7개국, 중·남아메리카 4개국을 정상들을 만났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뉴욕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각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은 내용과 형식 등 치밀하게 검토한 전략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며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우선적을 고려해 양자회담 상대 국가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월 하순으로 예정된 세계박람회 총회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이런 대면 양자회담을 통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고 의중을 확인하면서 노출해 나가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 판단했다”고 했다. 김 차장은 “부산 엑스포를 매개로 협력관계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나라들로 선별했고, 오찬 만찬을 할지 등 최대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만남의 형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박태홍 기자

시대전환 조정훈, 국민의힘 입당… 외연확장 신호탄

김기현 “연대·포용 실천”

국민의힘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역할을 했던 시대전환의 대표 조정훈 의원을 영입하면서 외연확장의 신호탄을 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화곡동 곰달래문화복지센터 강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 전에 동행 서약식을 열고 조의원의 합류를 축하했다.

전날(20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장으로 있었던 김현준 전 사장과 고기철 전 주경찰청장,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박영춘 전 SK그룹(수페스추구협의회) 부사장, 개그맨 출신 우파 성향 유튜버 김영민 씨를 영입한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시작이다 라고 출발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곳을 지향해 나간다면 보다 넓게 포용하고 두텁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또 그것이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는 정치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가 말의 잔치라고 비칠 정도로 공허한 말들이 무성한데, 오늘은 시대전환이 국

민의힘과 합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자체로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연대와 포용을 실천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좋은 인재를 모시는 것은 입당이나 합당이나 이런 절차적 문제를 넘어서 더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수렴하고 또 국민의힘이 약속드린 정책을 잘 이행하기 위해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25일 임명 동의 절차 열릴 예정
野 “의혹 해소 안 돼… 자질 의문”

국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정특위)가 21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만나 논의를 한 결과,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임명 동의 절차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인정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당 측 인정특위 위원들은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했던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정의를 비롯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적격 의견을 냈다.

반면, 야당 측 인정특위 위원들은 보고서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고, 이에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될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대법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부적격 의견을 냈다.

/박태홍 기자

인정특위, 이균용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했던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정의를 비롯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적격 의견을 냈다.

반면, 야당 측 인정특위 위원들은 보고서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고, 이에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될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대법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부적격 의견을 냈다.

/박태홍 기자